

한국방송학회 미디어정책특별위원회 토론회

# 차기 정부의 미디어 정책과 거버넌스 개선 방향

2022 02. 18(금)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술교수 김희경

# 목차

1. 정부조직 개편의 목적
2. 정부조직 개편의 주요 기준
3. 역대 정부의 ICT미디어 조직 개편 평가
4. 현행 ICT미디어 정책 평가
5. 미디어 정책 주요 쟁점
6. 차기 정부 ICT미디어 조직 개편 시나리오별 평가
7. 결론 및 논의

## 1) 정부조직 개편의 원리

- 정부조직개편은 어떤 목적과 효과를 지향하든 정부 안팎에 적지 않은 변화와 혼란을 초래
- 개편 전에는 조직개편의 목적달성 가능성과 부작용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고, 개편 후에는 그 실제 결과에 대한 체계적이고도 면밀한 진단이 요구

## 2) 정부조직 개편의 필요성

- (1) 기존의 정부조직 구조가 환경과의 정합성이 낮아진 경우, 환경 요구에 부합하는 정부조직 구조 마련
- (2) 정권 교체 등으로 국정관리 이념과 정책의 우선 순위 변경
- (3) 정부 관료제에 대한 새로운 국정 책임자의 무제 의식 반영
- (4) 정부 조직의 효율적 작동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structural problems) 등에 대한 처방

## 3) 정부조직 개편의 현실

- 대외적으로는 기존 편제의 구조적 문제나 기능상의 비효율성 문제의 해소 등을 표방
- 실질적으로는 정권교체와 같은 정치적 상황 변화를 반영하거나 특정한 정치적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
- 정부 조직의 개편은 행정적 목적(행정의 효율성 증대, 관료적 경직성 해소, 정부 운영의 방향성 제시, 행정의 책임성 증대)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국정 철학의 상징성 확보, 정치적 정당성 확보, 기존 정부와의 차별화, 정치적 위기 돌파의 기회 활용, 정권 연장의 일환)

## 2. 정부 조직 개편의 주요 기준

항목		규제		진흥		비고
사전적 의미		- 정부나 다른 권위 있는 기관이 무엇인가 수행되는 방식이나 사람들이 행동하는 방식을 통제하기 위해 형성한 규칙특정 행동을 통제하여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부정적 의미		떨쳐 일으킴, 무엇인가가 일어나거나, 증가하거나, 퍼지도록 돕거나 격려하는 것 특정 행동을 지원하여 일어나도록 하는 긍정적 의미		
최소 주의	Bernard(1939)	제한적(Restraining)		긍정적(Affirmative)-진흥적(Promoting)		이원론적 구분
	Brigham, et al.(1980)	처벌(Penalties) 법적 권위로 불편한 결과를 주는 제재		유인(Incentives) 보조금, 면세, 촉진적 수단		
변형 주의	Anderson(1977)	편의적 옵션(Biased Options) 정책목적에 부합하게 개인이 자발적으로 따르도록 유인기제 제시				이원론적 구분 + 통합 모델
		규제(Regulation) 정부의 강제적 권력으로 개인의 행동을 제한하고 명령하여 직접 통제				
	Vedung(1998)	규제- 정부기관이 규격화된 규정과 지침 수단을 활용하여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b>(지원과 규제의 중간 어디쯤)</b> 경제적 수단- 현금이나 현물 등의 물질적 자원을 지급하거나 회수. 보조금이나 세금 등 행위에 대한 직접적 부과보다 개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수단 사용		정보- 지식 이전이나 합리적 논쟁을 통해 의사소통이나 설득을 해서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도덕적 설득이나 권고	

## 2. 정부 조직 개편의 주요 기준

변형주의	전영한 (2007)	<b>(직접규제)</b> 강제성과 직접성이 모두 높고 인·허가, 법적 의무 부과 규칙 등이 포함	<b>(간접규제)</b> 강제성은 높지만, 민간인에 의해 집행되므로 직접성이 낮음. 자율규제, 위탁계약, 공공-민간 파트너십에 의한 규제, 반성적 규제	<b>(직접유인)</b> 강제성은 낮지만 직접성은 높음. 조세지출, 보조금, 정부의 직접대출 및 지급보증, 정보제공, 교육·훈련	<b>(간접유인)</b> 강제성과 직접성이 모두 낮음. 바우처, 시중은행을 매개로 한 정부대출, 위탁계약에 의한 공공서비스 및 정보의 제공	이원론적 구분 + 통합 모델
광의적 해석	Meier (1985)	정부가 시민과 기업, 하부기관의 행위를 통제하는 모든 시도라고 보았다. 경제 또는 공공의 목적을 실현하거나 이를 위해 설계된 정부개입의 모든 유형				통합 모델
	Baldwin (1999)	정부의 규칙 제정과 이 규칙에 대해 순응을 촉진하고 감독하며 조사하기 위한 명령의 구체적인 집합체				
	최병선 (19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람직한 경제사회 질서의 구현을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기업과 개인의 행위를 제약하는 것으로 명령지시적 강제 조치뿐 만 아니라 특허와 보조금과 같이 적극적인 유인을 제공하는 방식</li> <li>-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각종 법령이나 고시와 같은 규칙의 형태</li> </ul>				
	이혁우 (2009 a,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는 정부의 민간에 대한 강제적인 개입</li> <li>- (강제성) 처벌과 같은 명시적 조치를 수반하는 것뿐만 아니라 명시적이지 않더라도 요구하는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인식 또한 공식적이지 않더라도 강제성이 있으면 규제</li> <li>- (동태성) 규제는 시간에 따라 상황에 따라 변화</li> <li>- (지원정책의 규제적 속성) 프로그램 제작 지원은 지원조건 자체의 속성(법규주의 작동, 투입지향적 관리 등)과 사후적 강화(수혜집단의 기회주의에 대한 대응, 새로운 정책문제의 해결을 위한 지원조건 사후적 추가 등)를 포함</li> </ul>				

#### 1) 2008년 이명박 정부 조직 개편- ICT미디어 분산, 규제진흥 통합

- **(목적)** 방송통신 융합환경에 대응하고자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를 각각 통신과 방송 분야의 규제진흥 관할  
정보통신부(독임부처)- 통신 진흥+규제(통신위원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합의제 위원회)- 방송 진흥+규제
- **(결과)** 정보통신부의 ICT미디어 분야는 분산되었고, 방통위의 비효율화 극대화 및 정치적 중립성 훼손
- 정보통신부- ICT진흥: 지식경제부, 디지털 콘텐츠 진흥: 문화부, 국가정보화 및 정보 보안: 행안부
- 방송통신위원회-진흥이 아니라 규제에 집중되어 방송통신 융합환경 미 대응, 종편 4사 특혜 도입으로 정치적 중립성 위기
- 스마트폰 혁명으로 평가된 ICT 대변혁의 시기에 산업 경쟁력 약화 초래

#### 2) 2013년 박근혜 정부 조직 개편- ICT미디어 통합, 규제진흥 분산

- **(목적)** 미래부는 ICT 전담부처로서 분산된 기능을 통합, 기초과학과 ICT 융합을 통해 미래 산업 환경에 대응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방통위, 행안부, 지식경제부의 업무 통합 이관, ICT 콘트롤 타워 역할
- 방통위 유료방송 및 통신정책 업무까지 관장  
미래부= ICT+미디어(유료방송, 홈쇼핑, PP) 진흥  
방통위= 미디어(지상파, 종편. 보도, 지역방송, 공동체라디오)+통신(이용자 보호) 규제
- **(결과)**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의해 현재와 같이 기형적인 모습으로 재편
- 분산형 법제로 인해 사후적인 대응에 급급했고, ICT 관련 산업 간 긴밀하게 연계되는 각종 서비스 및 기술에 종합적인 대응을 하지 못함
- 부처 간 업무 중복과 이해관계 충돌로 갈등이 심화되고 조정능력 상실, 정책추진은 비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전략 수립 시행 비활성화  
ex) 700MHz 주파수 분배,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 단통법, 재송신료 분쟁 등
- 미래부는 전담 부처로서 ICT 관련 주요 기능을 통합하지 못하고
- 정부 3.0,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행안부, 창의 산업 및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산자부, 디지털 콘텐츠 및 미디어 일부:문화부

#### 3) 2017년 문재인 정부 조직 개편- 박근혜 정부 체제 유지

- **(목적)** 국정농단 사태 이후 시간적 여유없이 내각 구성이 시급했던 상황, 대대적인 조직개편은 무리수
- **(결과)** 미래부→ 과기정통부, 창조경제 진흥업무→ 중소기업벤처부로 이관, 실장급 과학기술전략본부→ 차관급 과학기술본부 격상
- 방통위는 존치, 기능 재조정안 없이 진행, 박근혜 체제와 동일한 문제 유지
- **(미디어 분야 주요 쟁점)**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 공영방송 지배구조, 공민영 체계 분류, 재원 구조, 지역방송대주주 보도, 건설사의 언론사 소유
- 방송광고 판매제도 개편: 미디어렙 사업방식과 조직구조 개편, 결합판매 개선, 코바코 체제 개편 등
- 시청자 권익 향상: 시청자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정립
- 언론의 공적 기능 강화: 가짜뉴스 규제, 언론과 포털의 공정한 콘텐츠 거래, 지역민신문(방송)발전지원특별법 일반법 전환 등
- 포털 및 OTT 공적 규제: OTT 매출 및 영향력 확대에 따른 공적 의무와 이용자 책임 부여

### 1) ICT 정책 평가

#### (1) 법률의 중복성과 법률체계의 정합성 부재

- 새로운 ICT 환경에 대한 부처별 정책 구분이 불명확하고, 개별 정책 성격이 중복되는 사례
- 현행 ICT 관련 법제는 다양한 법이 상호 관계 정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입법되어 진흥 및 융합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법률 간 충돌 혹은 적용범위의 불명확성 발생

#### (2) 정책 추진 부처의 분산 및 권한 충돌

- ICT 업무는 과기부, 방통위, 행안부, 문화부 등으로 분산, 정책의 일관성, 신속성, 통합성 및 효율성의 폐해
  - \* 문화부 <콘텐츠산업진흥법> 제12조, 과기부 <정보통신융합법> 제21조 : 디지털 콘텐츠 진흥 권한 중복
  - 과기부 <정보통신융합법> 제2조,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촉진법> 제2조 : 융합 업무 권한 주장
- 결정적 계기- 이명박 정부에서 정보통신부 업무가 관련 부처로 이관되고, ICT 총괄업무는 방통위가 담당
- 방통위는 방송통신 규제 업무에 집중하고 종편 도입 등 정치적인 사안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춘 결과 ICT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 상실
- ICT 정부 정책의 비효율 및 성장 정체

#### (3) 입법 지체 현상

- 개별 법률에서 규제를 열거하는 방식은 ICT 산업의 진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지체 현상 초래
- <정보통신융합법> 제정을 통해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한 신규 기술 및 서비스의 원칙적 허용(네거티브 규제, 제3조 제7항)과 법령이 없거나 있더라도 해당 서비스와 기술의 적용이 부합하지 않으면 신속처리(제36조) 및 임시허가(제37조)를 보장했으나 여전히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반발과 관련 부처의 판단으로 처리되지 못하는 현상 발생
  - \* 타 부처들이 ICT 융합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소관 법률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면,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을 도입한 '정보통신융합법' 적용 어려움



ICT 관련 법률 및 소관 부처

구분	법률	소관부처
방송정책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통위
	방송법	과기부, 방통위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통위
	방송문화진흥회법	방통위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방통위
방송통신융합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과기부, 방통위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과기부, 방통위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등에 대한 특별법	과기부
정보통신정책	전기통신기본법	과기부
	전기통신사업법	과기부, 방통위
	정보통신공사업법	과기부
	통신비밀보호법	법무부, 과기부
	정보통신산업진흥법	과기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과기부
	콘텐츠산업 진흥법	문화부
정보화 정책	국가정보화 기본법	과기부
	전자정부법	행안부
	전자서명법	과기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과기부, 방통위
	개인정보보호법	행안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과기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과기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방통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과기부, 법무	
전파	전파법	과기부, 방통위

### 2) 미디어 정책 평가

#### (1) 수평적 규제 체계의 미비

- 미디어 산업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를 개별 계층(전송, 플랫폼, 콘텐츠, 단말)으로 구분, 계층 내 동일규제, 계층 간 분리 규제 적용 원칙
- 수평규제 적용 시 동일서비스는 규제차별, 공백, 중복이 최소화되며, 혁신적인 서비스 및 경계 영역적 서비스의 탄력적 수용 가능
- 수평규제 적용은 규제 철학의 재정립, 계층 분류 및 범위 설정, 시장획정 등 실무적 논의 요구. 전환적 충격으로 인해 이해관계자들의 반발과 논쟁 등으로 관련법 적용의 어려움
  - : 신생 매체의 성격에 따른 법적 지위가 다르게 부여되거나 부여되지 않는 등 불공정 경쟁 환경 조성
- 이용자 보호 및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수평적 규제체계는 정부 조직 개편의 원칙이며 기초 공사로 반영

#### (2) ICT와 미디어 경계의 모호성 증가로 관련법 경계 모호

- 동일 계층 간 서비스 구분의 모호성 증가
  - : 동일 플랫폼 계층이지만 영상과 상거래 기반 서비스의 융합 현상 심화로 계층을 넘나드는 정책 요구
  - : 빅데이터, AI, 메타버스, 가상현실 등은 단말, 플랫폼, 네트워크, 콘텐츠 계층에서 향후 다양한 분쟁 초래 예상
  - : 자율주행자동차를 단말로 볼 것인지, 미들웨어 전자장치 플랫폼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 모호 등
- 부처별 ICT와 미디어 업무 경계의 모호성 증가
  - : ICT와 미디어 업무 담당
  - : 방통위, 과기부, 문화부, 행안부, 산자부, 국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 (3) 부처별 미디어 진흥 및 규제 기능 중복

- 미디어 관련 진흥 및 규제 업무 중복으로 부처 간 갈등 요소 산재, 부처간 기능은 분리되어 있지만 관련법상 규제와 진흥 업무 중복 현상
- (경쟁규제) 규제 및 진흥 기관 관할 중복. 특히 공정위 규제업무는 미디어 시장 대부분 적용 가능, 갈등 요소 잠재(방통위, 과기부, 공정위)
- (금지행위/조정/시정명령/과징금/이용자 보호) 진흥 및 규제기관 공히 관련 조항 존재, 부처간 업무 협조 요청도 다수(방통위, 과기부, 공정위, 문화부)
- (콘텐츠 진흥) 진흥 및 규제기관 모두 콘텐츠 진흥 업무 수행(방통위, 문화부)
- (온라인 플랫폼) 부처 간 관할권 갈등 심화(과기부, 문화부, 방통위, 공정위 규제 및 진흥 업무 갈등)

### 2) 미디어 정책 평가

#### (4) 부처 간 동일서비스 정책 중복 및 갈등

- (OTT) 문화부, 과기부 OTT 진흥/공정위, 방통위 OTT 규제(앱마켓-온플법, 온이법)/문화부 과기부 OTT 사업자 간 갈등(저작권)
- (지역매체) 방통위- 지역방송 규제 및 진흥/과기부- 지역채널 규제 및 진흥/ 문화부-지역신문 규제 및 진흥
- (유료방송) 방통위- 유료방송 진입규제 협의 및 공적 심사/ 과기부- 유료방송 규제 및 진흥/공정위-경쟁제한 심사
- (분쟁정책) 방통위,과기부-지상파 VS 유료방송/과기부,문화부-OTTVS음원사업자,콘텐츠 저작권자/방통위, 문화부-지상파VS외주제작

### 1) 공영방송

#### 배경

- 미디어 경쟁 격화의 환경에서 더 많은 시청자 확보와 광고 재원 확보를 위해 경쟁해야 하는 상황  
: 시청자 욕구에 부합하고 소비자 선택으로 성과가 도출되는 시장원리 작용으로 방송의 공익성 약화 및 실종 위기
- 사회적 필요와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차별화를 설명하지 못하는 공영 방송의 정당성 위기  
: 공영방송에 대한 신뢰도 하락, 수신료에 대한 낮은 부담 의사, 방만한 경영과 조직 운영에 대한 반발, 대체 재원 확보의 불확실성 가중  
: 공영방송의 사회경제적 위기

#### (1) 공영과 민영의 분리

- 공영방송 법적 지위 부재와 공적 책임 모호성  
: ‘방송법’상 공영방송의 정의 및 법적 지위 부재. 공영방송의 정체성과 분류에 대한 혼란 야기  
\* <공직선거법> 상 KBS와 MBC를 공영방송사로 구분하고 있는 상황
- 방송 일반의 공적 책임과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 미구분  
: 공영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공적 책무를 실천하기 위한 시스템이 정비되지 않은 상황
- 공영방송 존재 이유에 대한 도전  
: 방송시장 신뢰도와 영향력 감소  
: 공영방송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수요 부재

\* 미디어 정책 주요 쟁점 부분은 2021년 12월에 작성된 <한국방송학회 미디어정책특별위원회 정책 보고서>의 일부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공영방송은 심영섭, 최세경, 플랫폼은 홍대식, 이영주, 전범수, 거버넌스는 유홍식, 이상원, 김희경이 담당했습니다. 본 발표를 위해 미발간문의 인용을 허락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 1) 공영방송

#### (2) 공영방송 지배구조

##### 가. 이사진 구성과 사장 임명에서의 정치적 후견주의

- 공영방송 이사회의 구성과 사장 임명에 관한 사항은 법 제도와 현실의 괴리  
: 법률에서는 이사회 구성 시 방송의 전문성과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는 ‘시민모델’을 채택하고, 시민사회도 이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여야가 이사 수를 배분하여 정치적으로 임명하는 ‘의회모델’
- 여야 의석 수에 따라 7대4 또는 6대3으로 이사의 수를 배분하는 구조
- 방송의 전문성을 빌미로 각 공영방송사 출신의 인사가 이사로 임명되면서 감독기구가 오히려 공영방송에 포섭되는 문제 야기
-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회의 구성과 임명뿐만 아니라 운영계획 및 결산서의 제출, 정관 변경의 인가, 부동산 취득의 보고 등의 권한을 보유함으로써 ‘정치적 후견주의’ 작동

##### 나. 이사회 내부 감독 기구로서의 위상과 권한 부족

- KBS 이사회는「방송법」상“공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사 경영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둔다”는 규정으로 법적 근거가 명확하며, 별도의 집행기관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감독기구로서의 위상이 명확
- 그러나 방송문화진흥회와 EBS 이사회는 ‘주요사항 심의·의결기구’라는 위상만 부여되고, 법률상 별도의 집행기관도 명시되지 않아 일반 회사법인의 이사회 형태와 유사

##### 다. 이사회의 투명성과 책무성 부족

-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외부로 공식화하거나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의 미비로 정치권 등 외부로부터의 간섭에 취약한 구조
- 방송 관련법의 개정으로 ‘이사회 회의 공개’의 원칙이 정립되었지만 비공개로 처리되는 의결사항이 많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이사회 자체의 노력도 부족
- 내부감독기구로서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필요 자원과 조직이 자체적으로 확보되고 운용되어야 하지만 공영방송 관리감독과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공영방송의 자원과 조직에 의존하는 구조는 내부감독기구로서 기능을 제한하는 한계로 작용

### 1) 공영방송

#### (3) 공영방송 재원구조

##### 가. 공적 재원의 확보 어려움

- 미디어 경쟁격화로 공영방송은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상승, 시청률 감소에 따른 광고수익 감소
- 상업하의 압력과 경영혁신의 이중고

##### 나. 수신료 제도 운영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 증가

- 공영방송의 주요 재원은 수신료, 광고, 정부와 기관 지원금으로 구성
  - : 광고재원은 미디어 환경변화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 : 정부 기관 지원은 소수 프로그램을 유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수신료의 기능을 할 수 있지만 정부의 방송 통제력과 영향력 강화

##### 다. 수신료 제도의 문제점

- 수신료는 상업 재원과 정부 보조와 대비하여 안정적인 재원으로 활용 가능
- 예산과 재원의 규모가 일정하고,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공영방송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예산 및 지출의 예측이 가능해지고 다른 재원조달방법에 비해 더욱 안정적
- 시장 논리에 따른 시청률을 위한 프로그램 보다는 다양성과 소수 시청자층을 고려한 프로그램 제작 가능
- 공영방송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대다수 국가에서 방송환경 변화와 공영방송의 책무 확대의 필요에 따라 수신료를 지속하여 인상했지만, 우리나라는 1981년 수신료가 2,500원으로 현재까지 동결된 상태
- 현행 수신료 제도의 구조적 문제는 공영방송 재원 수요에 맞춰져 있지 않고,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서 따라 결정되는 문제

### 2) 플랫폼

#### 배경

- 넷플릭스, 애플 등 가입자 기반 OTT 동영상 서비스의 보편화로 국내 미디어 시장이 급변, 공정 경쟁 이슈 및 이용자 보호 문제
  - : 국내 사업자 경쟁력 상실
  - : IP 권한 제한으로 콘텐츠 사업자 하청 외주 전략
  - : 규제 공백 및 규제 중복 이슈
  - : 불법 및 유해 콘텐츠 유통 규제 부재

#### (1) 국내 미디어 플랫폼의 경쟁력 상실

- 유료방송의 경쟁력 상실
  - : 기존 플랫폼인 유료방송이 인수합병 수단을 통해 기업 규모를 확대하는 전략에만 집중해 온 반면 온라인 플랫폼은 VOD와 실시간 TV, VR 서비스 등을 통해 유사 서비스 제공
  - : 국내 OTT 플랫폼이 프리미엄 콘텐츠 및 이용자 정보 활용 기술에 대한 투자에 소홀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지 못한 반면 글로벌 플랫폼은 콘텐츠의 양과 품질, 서비스 가격 경쟁력으로 국내 미디어 시장을 장악하고 독과점 현상 강화 추세
  - : 통신 기반 플랫폼 사업자들의 전략은 글로벌 OTT 플랫폼과의 제휴 모델을 벗어나지 못하는 추세

#### (2) 콘텐츠 산업의 플랫폼 종속 현상 심화

- 국내 유료방송 시장이 IPTV 3사 중심의 과점 체제가 강화되면서 채널 단위 콘텐츠 사업자들의 거래 협상력이 축소되는 추세
- 글로벌 OTT 사업자들의 높은 제작비 투자로 국내 프리미엄 콘텐츠 시장의 플랫폼 종속 현상 심화

### 2) 플랫폼

#### (3)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경쟁제한 행위와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 가. 독과점 사업자의 경쟁제한 행위

- 독과점 지위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업체에 대한 경쟁제한 행위 확대
- ex) 앱마켓 입점업체, 온라인 쇼핑 자사우대, 웹툰, 웹소설 분야 2차 저작권 양도 요구

##### 나.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 OTT 사업자가 구독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은 소비자의 법정 기간 내 철회를 부당하게 방해함으로써 '가입은 쉬우나 해지는 어려운' 이용 해지 문제
- ex) 국내 및 해외 OTT, 음원 서비스 소비자 청약철회 방해 행위
- 요금 및 상품 등 가입정보 변경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의 미비와 정보 취약계층(고령층과 장애인, 저소득층과)의 정보 이용 불편 증가
  -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노출되는 개인정보 및 이용 정보 등 데이터 활용 여부에 대한 포괄적인 사전동의가 없는 경우, 실질적인 서비스 제한으로 이용자 선택권 제한

##### 다. 불법 및 유해 콘텐츠 유통 증가

- 별도의 인증을 거치지 않고 볼 수 있는 성인 콘텐츠와 타인 개인정보와 IP를 우회한 시청이 보편화
  -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유해 콘텐츠 및 연동형 유해 광고의 노출 증가로 인한 피해 사례 증가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가짜뉴스와 혐오 콘텐츠 확산
  - 불법·유해 콘텐츠는 자율규제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어 해외 사업자 제재는 제한적
-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불법정보 유통 제한(인터넷심의제도, 제44조의7)
- n번방 사건 이후 법 개정(2020.6.9.)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유통방지 책임자로 지정(제44조의9)



### 3)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

#### (1) 방송통신위원회

##### 가. 합의제 기구의 필요성

- ICT 및 미디어 산업은 기술과 서비스 진화의 속도에 부합하는 신속한 의사결정과 효율적 업무 처리 구조 필요
- 상향식 관료제 시스템은 가치 중립적 수범 대상의 지원과 진흥 업무와 기계적 규제 시스템에 적합
- 합의제 기구는 관료제보다 감시와 통제 사회적 의견 수렴 기능이 강함. 정치적으로 이해관계가 다른 상임위원들로 인해 관료제보다 의사결정이 느리지만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의사처리 가능
- 독립성, 공정성, 다양성의 가치를 구현하는 방송의 특수성을 반영하긴 위한 민주적 의사결정과 합의 중시
- 사회적 영향력이 크고 다양한 해석이 요구되는 수범 대상일수록 다수의 위원으로 구성된 의사결정 구조 안에서 사회적 합의를 가정하여 결정하는 안전한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중요해짐
- 두툼한 의사결정 구조와 임기가 보장되는 위원회의 특성은 관료제 하의 복지부동과 폐쇄성을 극복한다는 장점으로 작용

##### 나. 문제점

- **정치적 후견주의**
  - : 대통령과 여당이 3명, 야당이 2명을 추천하는 5인 체제로 위원 임명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치 개입
  - : 정부여당의 의중에 따라 위원회의 목표와 업무가 좌우되는 현상. 이명박 정부 종편 도입, 박근혜 정부 종편
  - : 정책지향적 의사결정이 아닌 정치적 이념과 사회 분위기가 정책을 결정하는 문제
- **대립제 합의기구**
  - : 방통위원장의 임기가 3년간 보장됨으로써 합의제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독임 부처보다 더 독주가 가능하다는 지적
  - : 느린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추진력과 실천력이 현저히 감소
- **최소 행정 기구**
  - : 박근혜 정부 당시 ICT 미디어 통합 정책, 규제진흥 이원화에 따라 미래부가 방송통신 진흥업무를 모두 가져가고, 유료방송 규제 업무 까지 독식하며 재원과 인적 규모에서 정부 내 최소 행정기구로 전략

### 3)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

#### (1) 방송통신위원회

##### 다. 개편 시 고려사항

조직의 목적- 방송 및 미디어 산업의 발전 vs 방송 및 미디어의 공공성 강화

위원 및 위원장 선출-대통령과 정당의 추천 임명 방식 유지 vs 국민 추천제 등 대안 도입

위원 및 위원장의 자격요건- 방송 관련 전문성 vs 방송통신 관련 전문성 vs 다양한 분야

범위-방송 미디어 일반 정책 vs 방송 미디어 규제 vs 방송 일반 정책 vs 방송 규제 vs 지상파 방송 규제 vs 공영방송 규제

####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가. 현황 및 문제점

- 과학일반과 ICT 분야가 동일 부처에 존재함으로써 시너지 효과 창출의 어려움. 상호 분야의 연관성 적음
- 독임제 부처로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을 포괄하고 있지만, 정보통신 부문은 상대적으로 왜소하며, 방송 관련 업무는 협소한 형태로 존재
- PP와 같이 창의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ICT 기구의 규제 정합성 문제

##### 나. 개편 시 고려사항

조직의 목적- ICT 산업발전과 과학기술 진흥 vs 4차 산업혁명 대응

과학기술과 ICT 분리 여부-과학기술과 ICT 분리 vs 과학기술과 ICT 통합 유지

ICT 진흥과 규제의 분리 여부 -과기부 진흥과 방통위 규제 업무 분리 vs 진흥과 규제 통합

### 1) 통합형

#### (1) ICT미디어 통합형

- C-P-N-D의 체계의 융합현상 심화와 관련 시장의 변화 극대화로 ICT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단일 부처의 필요성 증가
- 개별 계층의 구분이 모호하고 경계가 허물어지는 시점에서 일원화된 지원 시스템 필요
- ICT 산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높고 국내 경제의 높은 ICT 산업 의존도 감안

항목	장점	단점
통합의 가치	- 네트워크와 디바이스를 제외한 콘텐츠(or 소프트웨어)와 플랫폼 경쟁력이 취약하므로 통합적 시각을 가지고 ICT 관련 산업을 아우르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	- 기능의 화학적 결합이 단기에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은 물론 조직원들 간 갈등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선부른 통합 부처 설립 경계
효율성	- ICT와 미디어 융합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부처를 신설함으로써 해당 산업 업무 추진의 효율성 추구 - 분산형 거버넌스 구조의 문제점 해결 가능	- 거대 부처를 중심으로 한 통합형 거버넌스는 ICT 산업의 발전에 있어 관료 주도성이 강화될 우려가 있으며, 연구 기관의 자율성 후퇴 가능
갈등		- ICT 생태계 특성상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부서간 ICT 관련 업무영역을 경쟁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부서 간 업무중복 및 갈등 심화

### 1) 통합형

#### (2) 규제 진흥 통합형

- 기술 융합 시대에 진흥과 규제의 구분은 어렵고, 국내 제도 및 기관 운영의 관계상 행정기관의 직무를 규제와 지원으로 구분하지 않음
- 규제와 진흥은 시장 개입의 스펙트럼 상 상대적 위치로 파악 ex) 이용자 보호(개인정보보호)vs 산업진흥(데이터 산업)
- 정책과 규제 기능 통합으로 산업의 선순환 구조 마련

#### 가. 독립 부처 내 규제위원회 통합

- 일부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방송정책 분야는 공정성, 다원성 등을 고려하여 규제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직 간 정책 갈등 최소화를 위해 부처 내부에 설치(구 정통부 내 통신규제위원회 모델, 김성철, 2012; 윤석민, 2012)
- 정치적 고려가 필요한 방송사업자 인허가, 공영방송사 지배구조 및 임원 선임, 수신료 인상 등의 사안들을 독립적으로 처리
- 규제위원회의 규제범위를 법으로 사전에 규정)

항목	장점	단점
통합의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문화적 가치와 시장효율성을 추구하는 가치의 균형</li> <li>- ITC와 미디어 부문의 균형 발전 추구</li> <li>- 산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규제 및 진흥 업무 협조 용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처 내 규제위원회의 위상 모호</li> <li>- 부처 내 위원회 독립성 확보의 문제</li> </ul> <p>: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방송규제를 독립제 부처가 담당할 경우, 방송규제의 독립성 보장 어려움</p>
효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쟁 기구화되어 과거 방송위와 정통부의 소모적 다툼 현상 재발 방지</li> </ul>	
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치와 정책의 영역을 구분,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한 방송 관련 업무를 독립적으로 추진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의제 위원회와 부처 간 이견 발생시 조율 방법 난망</li> </ul>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처로부터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행정권한, 담당 정책 사안 등의 독립성 확보</li> </ul>	

### 1) 통합형

(2) 규제진흥 통합형

나. 규제위원회의 독립적 분리(구 정통부와 방송위원회 모델)

- ICT 규제와 진흥을 통합하되, 방송 규제 기능은 독립적인 기구에서 분리 수행
- ICT 정책 기능을 독임제 부처가 담당하고 방송 관련 규제는 합의제 방식의 방송통신위원회 담당
- 방송규제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별도의 전담 부처 내부의 독립위원회 형태로 운영하거나 부처 외부로 독립

항목	장점	단점
독립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의 독립성 보장 및 정치적 중립성 이슈를 단기적으로 해결</li> <li>- 방송정책을 독임제 행정기구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정치적 독립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으므로 별도 분리가 중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립성이나 독립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음 : (부처 내부로 독립할 경우) 정치 후견주의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 : (부처 외부로 독립할 경우), 과거 방송위 모델 재연 민간 신분으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독립되지 못했고, 다른 행정부처와의 조율도 어려웠던 전력</li> </ul>
효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 기능의 일원화로 보다 효율적인 산업 진흥을 꾀할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과 통신관련 업무의 분리로 융합현상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li> </ul>
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임제 행정부처는 방송에 대한 실질적 정책 권한을 잃게 되므로 과거 정통부 방송위의 이원화 구조와 차별성 없음</li> </ul>

### 1) 통합형

#### (2) 규제진흥 통합형

##### 나. 규제위원회의 독립적 분리(구 정통부와 방송위원회 모델)

항목	장점	단점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의제 위원회의 위원은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이익을 반영하기 위하여 현 5인 위원 시스템보다 그 수를 늘려서 다양한 분야의 의견이 반영(윤석민, 2012; 언론개혁시민네트워크, 2019)</li> <li>Ex) 위원회의 구성을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17-20명으로 확대하고 그 구성을 노동자, 여성, 지역 출신 등으로 세부조건을 명시,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 보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의제 위원회의 위원수 증가로 발생할 수 있는 의사결정 지연의 문제는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들의 역할을 적절히 조정. 업무별로 신속히 처리할 문제와 숙의를 필요로 하는 문제를 나누어 처리하면 해결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수 상임위원회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li> <li>: 다수 비상임위원회는 정치적인 민감 사안에 대한 합의를 결의</li> </ul> </li> </ul>

### 1) 통합형

(2) 규제진흥 통합형

다. 별도의 공영미디어 위원회 설립(성동규, 2022.1.10)

- ICT미디어 규제진흥 통합 독임제 부처를 설치하고, 공영방송 분야만 별도의 형태로 독립시키는 방안
- 합의제 기구인 독립위원회 형태의 기구는 지상파와 종편 인허가 업무 관리

항목	장점	단점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형 모델의 장점 극대화</li> <li>- 방통융합 정신 극대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직의 비대화에 대한 권한 집중의 부작용 초래</li> </ul>
효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빠른 의사결정과 부서 간 유기적 협력 가능</li> <li>- 통합되고 일관적이며 장기적 진흥 방안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문화적 영향력, 창의성이 수반되는 플랫폼 일부와 콘텐츠 일부 규제 기능을 정부 부처가 통합하고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의 문제 발생</li> <li>- 독임제 부처의 상향식 의사결정 시스템은 관료제의 폐쇄적 운영과 별도의 숙의과정 부재로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하는 방송 분야의 민감 사안을 결정하는데 부적절</li> </ul>
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영방송의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인지에 대한 모호성</li> <li>- 공영방송 인허가 기능이나 규제 기능만을 수행하는 위원회의 계도화</li> <li>- 공영방송 제작 및 편성의 기능을 공익적 목적에만 한정시키는 결과 초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영방송은 고품질 콘텐츠 제작원, 재원구조가 불안정한 국내 공영방송의 입장에서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을 반영한 경쟁체제로의 전환은 필수불가결한 요소</li> <li>: 재원 방안이 마련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함</li> </ul> </li> </ul>

## 2) 분리형

### (1) 규제진흥 분리형(김성철, 2012; 방송통신위원회, 2011)

- 독임제 부처 진흥, 합의제 위원회 규제
- 규제와 진흥은 양립이 어려우며 한 조직에서 규제와 진흥을 담당할 경우 진흥이 규제보다 우선되는 경향
- 진흥은 산업, 규제는 규범적 측면이 강조되므로 각 영역에 적합한 의사결정 구조가 있으며, 관련 전담부처가 담당해야 한다는 논리

항목	장점	단점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와 진흥 업무 분리로 진흥 업무 촉진 가능</li> <li>- 진흥과 규제의 분리로 규제의 독립성 확보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흥과 규제의 구분 모호성 : 방통위 주요 업무에서 진흥과 규제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움</li> <li>: 가장 좋은 진흥 수단은 규제 완화</li> <li>: 규제만 별도로 분리할 경우, 규제와 진흥 정책의 연계 약화</li> </ul>
효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빠른 의사결정과 부서 간 유기적 협력 가능</li> <li>- 통합되고 일관적이며 장기적 진흥 방안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의 정책적 속성과 집행적 성격 간의 구분이 모호하여 규제의 현실 적합성 저해 우려</li> </ul> <p>Ex) 박근혜 정부 미래부와 방통위의 관계 700MHz 주파수 대역 분배 문제</p>



## 2) 분리형

### (2) ICT 미디어 분리형(안정상, 2021.12.8)

- ICT 규제진흥기구와 미디어 진흥규제 기구를 분할하는 방안
- 현대행정은 규제와 진흥을 개념적으로 구분하기 쉽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규제와 진흥의 구분 없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판단
- 부처별 흩어져 있는 ICT 미디어의 규제와 진흥을 일관된 기관에서 관할
-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정책은 미디어 정책과 논의되기 어려운 구조

항목	장점	단점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공익공공성 영역을 제외 하면 미디어 진흥규제 업무 분할 용이 : 미디어 산업 진흥과 사후규제 등으로 분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CT와 미디어의 경계가 모호한 지점의 분리 기능 문제</li> <li>- 규제나 진흥 어느 하나만 강조될 가능성 높음</li> </ul>
효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CT 분야 규제의 수위와 속도 조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디어 규제 진흥 조직의 성격 정립이 관건 : 합의제 조직의 문제 해결 난망 : 정치적 독립성 부재, 느린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추진력과 실천력 감소</li> <li>- C-P-N-D의 수직적 위계에 있는 사업자 간 분쟁 조정 상실 Ex) 망 중립성</li> </ul>
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P-N-D의 분리로 수평적 규제 시스템 도입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P-N-D 계층 간 상호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조정 능력 상실 Ex) AI 알고리즘으로 뉴스 서비스의 편향성 강화</li> <li>- 기술진화에 의해 경계 영역적 서비스의 출현시 관련 부처의 관할권 경쟁 격화</li> </ul>

### 1) ICT와 미디어 진화의 방향

**미디어 생태계의 변화로 모든 개별 층위에서 모두 산업성과 공공성이 요구되고 있음**

- C-P-N-D 확장과 미디어 진화의 속도가 빠르게 전개되면서 혼종(mixed) 산업의 증가와 미디어 경제 생태계 변화
- 계층별 서비스 및 기술의 상대적 공공성과 산업성에 주목
- 미디어 간 산업과 공익성의 지나친 구분으로 미디어는 규제 중심, ICT는 진흥 일반도의 사고는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부적절
- 매체적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과 미디어 경쟁격화 상황에서 발현되는 최소한의 상업주의 공존 현실 반영

### 2) ICT와 미디어 거버넌스의 기본 방향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행정적 목적을 위한 거버넌스 개편 필요**

- 새로운 거버넌스 구조는 정치적 협상의 산물이 아니라 면밀한 분석과 신중한 논의를 통해 대안이 검토, 선택되어야 함
- ICT 분야는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과 사전조사가 실시된 전문가 집단의 참여율을 높이고, 부처간 규제개혁 및 상대적 공공성 수요조사
- 미디어 분야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개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집단의 의견 수렴 과정이 수반되어야 함
- 공영방송과 미디어 규제 거버넌스 등 상대적 공공성과 사회적 책무가 무겁게 부여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다양한 영역을 대표할 수 있는 전문가의 참여로 공적 책임 수요(노동자, 소수자, 지역 등) 를 파악하고, 이들의 이해관계 반영

### 3) 거버넌스 모델의 채택

**완벽한 모델은 부재, 보완과 대안 제시 필요**

- ICT 미디어 통합형은 거대 부처의 탄생으로 관료 주도적 운영과 효율성이 상실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하고, 규제 진흥 통합은 방송규제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
- 규제 정책 분할이나 ICT미디어 분할은 분할 대상 경계의 모호성과 부처간 부처 간 업무 중복으로 갈등을 필연적으로 동반
- 운영의 대안과 보완 제시 필요

- 강재원·김희경·심영섭·이상원·이영주·유홍식·전범수·최세경·홍대식(2021.12), 차기 정부 미디어 정책 개선방안, 한국방송학회 미디어정책특별위원회.
- 김상택·김해람·임연규 (2012). 국가 ICT 거버넌스 개편 방안. <정보사회와 미디어>, 22호, 35-61.
- 김수원·김성철 (2017). 문재인 정부의 방송통신 정부 조직 개편 방안. <방송통신연구>, 99호, 9-36.
- 김유향·정준화(2013), “ICT 특별법」 통과와 향후 과제”, <이슈와 논점>, 제694호.
- 문명재 (2008). ‘정부조직개편과 국정운영의 이론과 실제. 한국행정학회 세미나 발표논문
- 민진 (1995). 정부조직개편에 관한 연구: 1994년 12월 중앙행정기구개편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29(3): 1003-1016
- 박대식 (2009). 정부조직개편 결정과정 비교분석: 전면개편과 부분개편을 중심으로. <한국조직학회보>, 6(3): 143-172.
- 박천오 (2011.4), 한국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조직학회보> 제8권 제1호, pp.1-30.
- 성동규 (2022.1.20), 차기 정부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방향, <미디어ICT 공약 및 정책 방향 공청회>,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본부.
- 안정상 (2021.12.8.), 방송혁신기구 설립운동 방안 토론회 토론문, 한국미디어정책학회.
- 윤석민 (2012). 과잉 정치화된 미디어 정책 시스템의 해법 찾기: 합의제 미디어 정책 기구 설립을 중심으로. <입법과정>, 4권 2호, 167-195.
- 정윤식 (2013). ICT 거버넌스 구조 개편과 새 정부 방송 정책. <방송문화연구>, 25권 1호, 7-38.
- 정충식 (2014), “ICT특별법의 제정과정 및 문제점 분석”, <한국IT서비스학회지>, 제13권 제3호.
- 최경진 (2013. 5). “미래 ICT 법제체계 개편방향”, <정보법학>, 제17권 제1호.

- Anderson, C. W. (1977). *Statecraft: An Introduction to Political Choice and Judgement*.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 Baldwin, R. & Cave, M. (1999). *Understanding Regulation: Theory, Strategy and Practi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Bernard, L. L. (1939). *Social Control in It's Sociological Aspects*. New York: Macmillan.
- Brigham, J. & Brown, D. W. (1980). "Introduction." In J. Brigham and D. W. Brown (eds.), *Policy Implementation: Penalties or Incentives?* Beverly Hills, CA.:Sage.
- Bolman, Lee G. and Terrence E. Deal. (1985). *Modern Approaches to Understanding and Managing Organizations*.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 Cohen, Steven and William Eimicke. (1995). *The New Effective Public Manager*. Sa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 Meier, K. J. (1985). *Regulation: Politics, Bureaucracy, and Economics*. New York: St. Martin's Press.
- Vedung, E. (1998). " Policy Instruments: Typologies and Theories." In Bemelmans Wıdec, M. & Rist, R. C. & Vedung, E. (eds.), *Carrot, Stick and Sermons: Policy instruments and their evaluation*, 21-58. New Brunswick (U.S.A.) and London(U.K.): Transaction Publishers.



**감사합니다**